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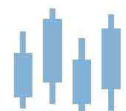
WP 19-10

#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시사점과 한국사회 적용

기후위기와 불평등, 일자리 대안으로서 그린 뉴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leeyujin2010@gmail.com)



※ 이 Working Paper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저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연구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은 저자의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고, 인용 시에는 저자 및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차례

01 다시 부상한 미국의 그린 뉴딜	05
02 한국사회 그린 뉴딜의 필요성	09
03 오바마와 이명박 정부 그린 뉴딜 비교	13
04 한국사회 그린 뉴딜 적용 방안	23
05 결론	29



# 01 다시 부상한 미국의 그린 뉴딜

-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일자리와 경제 대안으로 그린 뉴딜 등장
  - ‘뉴딜(New Deal)’은 1932년 제32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잊힌 사람들을 위한 뉴딜’을 표방하며 공공사업을 통해 추진한 사회경제 개혁 정책<sup>1)</sup>
  - 2007년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뉴딜’을 제시한 것처럼, 21세기에는 깨끗한 에너지산업에 투자해 경제를 부흥하자고 제안(Friedman 2007)
  - 2008년 영국 그린 뉴딜 그룹(Green New Deal Group)은 금융위기·기후변화·고유가의 삼중 위기를 해결하고 저탄소 경제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하면서 금융·세제·에너지 부문 구조조정 강조(Green New Deal Group 2008)
  - 2009년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lan, UNEP)은 기후변화, 환경 악화, 빈곤을 해결할 경제와 고용 대안으로 세계 그린 뉴딜 정책 보고서 발간. 주요 투자 분야는 1)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2) 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포함한 재생가능에너지 3) 하이브리드 자동차, 고속철도, BRT(Bus Rapid Transit) 지속가능한 교통 4) 깨끗한 물, 숲, 토양, 산호초 보전을 담은 생태 인프라 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UNEP 2009)
  - 2012년 미국 녹색당 대선후보 질 스타인(Jill Stein)은 낮은 회색 경제를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할 대안으로 그린 뉴딜 공약.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net zero)와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100% 전력 생산으로 기후위기에 맞서며, 경제권리 장전으로 건강보험, 모두에게 안정적인 주거, 생계임금을 보장받는 일자리, 대학 무상교육 정책 제시<sup>2)</sup>

1) Democratic promise of a "new deal" for the "forgotten man"(<https://www.britannica.com/event/New-Deal>)

2) [https://www.gp.org/green\\_new\\_deal](https://www.gp.org/green_new_deal)

- 2019년 2월 7일, 미국 민주당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 목표 ‘그린 뉴딜 결의안’<sup>3)</sup> 제출
  - 최연소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를 포함한 민주당 하원의원 64명과 상원 의원 9명 ‘그린 뉴딜 결의안’ 제출(Alexandria Ocasio-Cortez 2019). 미국 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할 대안으로 그린 뉴딜 제시
  - 그린 뉴딜은 ‘그린’과 ‘뉴딜’의 조합. ‘그린’은 환경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파괴적 인프라를 지원하지 않으며, 빈곤층과 노동자를 희생시켜 부와 이득을 소수에게 몰아주는 불공평한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를 현대화하는 것, ‘뉴딜’은 세계 2차 대전 시기에 인력과 자원을 동원한 것처럼 대규모 정부 사업으로 생산적이고 높은 임금의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들어 경제 번영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Hockett and Gunn-Wright 2019)
  - 결의안은 총 14쪽이며, 1.5도 IPCC 특별보고서로 시작해 미국 사회에 뿌리 깊은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문제에 대해 강조. IPCC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0년 대비 40~60% 감축하고, 2050년에 넷 제로를 달성해야 함. 결의안은 2014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는 미국이 경제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배출량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
  - 연방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펼쳐야 할 의무로 1) 공동체와 노동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제로 달성 2) 미국 시민 모두를 위한 수백만 개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번영-안정 보장 3) 21세기 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프라와 산업 투자 4) 모든 시민과 이후 세대를 위한 깨끗한 공기와 물, 기후와 지역 사회 회복력, 건강한 식품, 자연과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접근권 보장 5) 모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을 멈추고 정의와 형평성 증진을 명시함<sup>4)</sup>
  -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모든 인프라 업그레이드,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100% 전력 생산, 스마트 그리드 구축, 대중교통 확충과 고속철도 도입, 건물 에너지 효율화, 농업부문 탄소 중립 등 14개 부문 제안(〈표 1〉 참조)
  -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이 그린 뉴딜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활발한 논의 진행 중. 조 바이든(Joe Biden)은 2050년 온실가스 넷 제로를 목표로 1.7조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는 2030년까지 모든 전력과 운송을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하며 화석연료 기업으로부터 일부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16조 달러 편성을, 엘리

3) 하원 결의안 109 (H.Res.109, 116th Congress 1st Session), 2018년 2월 7일(현지 기준).

4) 결의문에서 언급한 사회적 약자는 원주민, 유색 인종 공동체, 이민자 공동체, 비 산업화한 지역 공동체, 인구소멸 위기의 농촌 공동체, 빈곤층, 저소득층 노동자, 여성, 노인, 집이 없는 사람들, 장애인, 청소년을 말함.

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은 청정에너지 생산과 연구에 2조 달러 편성을 공약으로 제시(Sarlin 2019).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 뉴딜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파리협정<sup>5)</sup> 탈퇴를 천명(CNN 2019)

**표 1** 그린 뉴딜 결의안에서 10년 내에 추진해야 할 14개 주요 프로젝트

- 국가적으로 14개의 인프라와 산업 프로젝트에 투자. 전 분야에 걸쳐 온실가스와 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10년 이내에 실현해서 성과를 만들어야 할 프로젝트
  - A. 기후변화 재해로부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
  - B. 미국의 모든 인프라를 기후변화 재난 대응과 깨끗한 물,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개선
  - C. 청정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 탄소 배출제로 에너지를 통한 100% 전력 생산
  - D.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적이고 분산된 스마트 그리드 구축
  - E.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모든 건물개선
  - F. 산업 부문에서 청정 공정 방식 확산(태양광 패널 산업, 풍력터빈 공장, 배터리 및 저장 산업, 에너지 효율), 산업공정에서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방지
  - G. 농민·목장주와 협력해 지속 가능하고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며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식량 시스템 구축, 독립적인 가축농 확대
  - H.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교통체계 수립, 초고속 열차망 건설, 대중교통 확충으로 내연기관 차량 대체
  - I. 기후변화와 오염으로 인한 장기 건강 영향 완화
  - J. 숲 가꾸기, 보전, 자연복원을 통해 대기 중 온실가스를 줄이고, 오염 해결
  - K. 훼손되고 위협받는 모든 생태계 복원
  - L. 기존 유헨폐기물로 버려진 땅을 정확히 경제적으로 활용하고 지속가능성을 증진
  - M. 새로운 배출원을 확인하고 온실가스 제거 해결책 마련
  - N.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 선두주자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세계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정보, 기술, 전문성, 성과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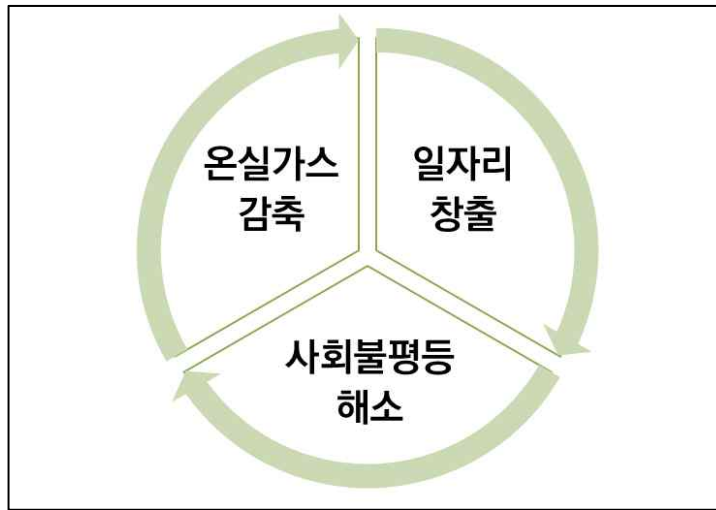
출처: <https://www.congress.gov/116/bills/hres/109/BILLS-116hres109ih.pdf> (2019년 12월 27일 검색)

-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고단한 삶을 대전환하는 정책으로 지구 평균기온을 1.5도 이내에서 안정화할 수 있도록 화석 문명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한 사회·경제·정치·산업 구조 개혁 정책. 선라이즈 무브먼트(Sunrise Movement)<sup>6)</sup>를 포함한 청년 기후변화행동 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

5)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으로 2021년부터 협약대상국 모든 국가가 UN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행에 옮겨야 함.

6) <https://www.sunrisemovement.org/>

**그림 1** 그린 뉴딜의 3대 지향 목표



■ 미국의 그린 뉴딜은 파리협정을 포함,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 경제 정책에 영향

-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미국 시민의 90% 이상(민주당 96%, 공화당 83%)이 기후변화 정책을 위한 ‘협치’가 필요하다고 응답(eco America 2018)
-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11월 4일 UN에 성명을 보내 파리협정 탈퇴 통보. 자동차 연비규제 완화, 석탄발전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완화와 보조금 지원,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 반환경 정책 추진. 2020년 미국 대선에서 기후변화 정책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별성이 두드러지는 분야
- 2020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같은 파리협정 미준수 국가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 민주당이 승리하면 기후변화 정책이 주류화된 유럽에 그린 뉴딜을 표방한 미국까지 가세해 온실가스 넷 제로를 위한 세계 경제전환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 큼
- 미국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바 있음.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sup>7)</sup> 대비 25.7%를 줄인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오바마 대통령과 통화 이후 37%로 상향. 늘어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감축분 11.3% 추가(강찬수 2018)

7)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배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온실가스 총량



## 02 한국사회 그린 뉴딜의 필요성

### ■ 세계 기후규제 강화와 기후위기 비상행동 확산, 기후변화 대안으로 그린 뉴딜 확산

- IPCC 1.5도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기온을 1.5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0년 배출량 기준 45%를 줄이고, 2050년 넷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권고함(IPCC 2018)
- 스웨덴 청소년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가 시작한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시위 전 세계로 확산. 2019년 3월 15일 집회에 128개 국가, 2,333개 도시에서 청소년 140만 명이 참여. 영국에서는 시민들의 ‘멸종 저항’ 행동이 활발해지고 있음
- 전 세계 25개국 1,216개 지자체 기후비상사태 선포, 해당 인구는 7억 9천 8백만 명에 달함(2019년 12월 27일 기준)<sup>8)</sup>. 11월 28일, 유럽의회가 ‘기후·환경 비상사태(climate and environmental emergency)’를 선언하고 2050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온실가스 배출 ‘0’을 약속할 것을 촉구
-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그린 딜’을 표방하며, 2050년 넷 제로 법제화와 2030년 감축 목표 50% 상향 선언(Harro van Asselt, Susanne Droge and Michael Mehling 2019).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한 회원국에 세금을 매기는 ‘탄소 국경세(CO2 Border Tax)’ 도입.<sup>9)</sup> 전환 자금 확보를 위해 ‘유럽투자은행’ 일부를 ‘기후은행’으로 전환해 향후 10년 동안 1조 유로 투자 제안<sup>10)</sup>
- 영국 녹색당 캐롤라인 루카스 의원(Caroline Lucas)은 2019년 3월 26일, 그린 뉴딜 정책으로 탈탄소 경제전략 법안(Decarbonization and Economy Strategy Bill) 발의.<sup>11)</sup> 영국 정부는 G7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넷 제로 법안 제출(강상원 2019). 2019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녹색산업혁명(Green Industrial Revolution)’ 공약 제시<sup>12)</sup>

8) <https://climateemergencydeclaration.org/> (2019년 12월 27일 검색).

9) 탄소 국경세는 약 10년 전부터 프랑스를 비롯해 몇몇 국가가 제안해 논의되었으나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들은 반대 입장

10)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만들어 석탄산업 관련 공동체를 포함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이들을 지원한다고 밝힘

11)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bills/cbill/2017-2019/0365/190365.pdf> (2019년 12월 29일 검색).

- 주요 20개국 정상회담(G20)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만든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ask Force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TCFD)는 2017년 7월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권고안 발표.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재무적 영향 및 관련 경영·위험 관리 체계를 재무보고서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금융부문에서 기후 위험 반영 가속화

## ■ 2021년 파리협정 이행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지속 증가

- 한국은 2017년 기준 온실가스배출량이 전년보다 2.4% 늘어난 7억 914만 톤으로 집계(관계부처 합동 2019a). 최대 배출량을 기록했던 2013년 6억 9670만 톤을 넘어섬. 저먼워치(German Watch)가 평가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0’에서 61위 중 58위 기록.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5억 3600만 톤으로 배출량을 줄여야 하지만 현 정부에서도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중
- 2023년 UN 차원에서 각국 감축 이행 점검이 진행될 예정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신인도 하락과 경제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 있음. 영국 금융 두뇌집단인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는 한국이 석탄발전을 계속하게 될 때 손실액은 1,060억 달러로 손실액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전망(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 2019). EU의 기후비상사태 선언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우려 증대(매일경제 2019a)
- 파리협약 당사국은 2020년까지 2030년 국가별기여방안(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과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ong-term low GHG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EDS)을 UN에 제출해야 함. 파리협정이 관세장벽을 포함한 규제정책으로 자리 잡으면 한국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인 국가는 경제 사회적 타격 예상

## ■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산업전환과 일자리, 고질적인 불평등 문제 상존

- 한국경제는 중국의 추격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 조선·철강 등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자동차·전자·석유화학도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로 제조업 공동화 우려(김정식 2019)

12) <https://labour.org.uk/manifesto/a-green-industrial-revolution/> (2019년 12월 29일 검색).

- 세계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자율주행차 투자를 늘리면서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을 줄이는 구조조정 단행(매일경제 2019b). 전기차의 빠른 확대는 내연기관 차량 생산 및 부품 산업을 포함한 관련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기후규제와 기술발전이 산업과 고용에 미칠 충격에 대비해야 함
-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원전과 석탄발전 관련 산업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원전과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으로 빠른 전환과 더불어 정의로운 전환<sup>13)</sup> 대책 필요
-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1%이고 청년실업률은 7%(2019년 11월 기준).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sup>14)</sup> 10.5 %이고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0.4%(통계청 2019). 고용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인구 감소,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 등 향후 고용여건 불확실
-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이 일자리 확대를 위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음. 산업고도화 시대에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영역은 에너지, 환경, 돌봄, 여가 분야 등으로 기존 산업과 경제정책을 대전환하는 종합정책 필요

#### ■ 경기침체에 따른 확장재정의 필요성

- 2019년 4월 발간된 IMF의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는 세계 경제 둔화와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경기침체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과 같이 재정 여력이 있는 선진국은 확장재정 및 조기 집행 등 충수요를 증가시키는 재정정책 시행을 권고(기획재정부 2019)
- 불황을 내버려 두면 실업 장기화로 인적 자본 손실이 발생하고 투자 의욕 감퇴로 실제 투자율이 하락하면서 공급능력과 잠재성장률이 저하되는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조영철 20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전환적 뉴딜’ 보고서를 발간, 경제위기를 예방하고, 새로운 산업 요구에 대응해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포함한 전환적 뉴딜 제안(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전략적 재정투자에 의한 경로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 국가’를 위한 재정책대 강조(유종일 2019)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에 따른 피해와 비용이 사회적 약자에게 일반적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되며 정의로운 방식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개념.

14) 공식 실업률이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통계청의 ‘고용 보조지표 3’을 이룸. 확장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잠재 경제활동인구’ 대비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잠재 경제활동인구’의 비율로 나타냄.

## ■ 한국사회 그린 뉴딜 필요성<sup>15)</sup>

- 그린 뉴딜은 정부의 재원, 인력, 정책 투입을 통해 단기간에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할 대안으로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3천 6백만 톤으로 줄여야 함
- 한국 사회에서도 ‘기후변화’와 ‘경제적 불평등’, ‘일자리’ 문제는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며, 불황에 따른 일자리 대책으로 확장재정이 필요한 가운데 ‘그린 뉴딜’은 적합한 정책이 될 수 있음
- 온실가스 감축 대안과 기술이 발달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면 일자리 창출 발생. 세계 신규발전 설비 투자액의 70%가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수력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되고 있으며, 재생가능에너지가 석탄, 가스, 원전보다 더 저렴해져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sup>16)</sup>에 도달한 국가가 늘어나고 있음. 효율 높은 에너지 설비, 스마트 그리드, 전기차, 수소차와 제로 에너지 빌딩, 플러스 에너지 빌딩 등 기술 대안이 가격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2019년 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에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수립.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국가와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주요 과제로 설정. 미세먼지, 에너지전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연결되어 있으며, 화석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규제와 산업전환정책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덴마크에서 열린 P4G(녹색성장 파트너십)<sup>17)</sup>에서 1.5도 안정화를 지지하며, 녹색성장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연설. 이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심층 평가를 바탕으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정책 설계 필요
- 그린 뉴딜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해 한국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미국 민주당의 그린 뉴딜 재부상은 오바마 정부의 그린 뉴딜 경험을 기반(Aldy 2019)으로 하고 있으므로 오바마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그린 뉴딜의 비전과 주요 내용, 추진전략 제시

15) 이유진(2019)의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담은 그린 뉴딜이 필요한 때. 2020 한국의 논점, 289-297. 서울: 북바이북”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16) 그리드 패리티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발전원가가 원유 등 화석연료 발전원가와 같아지는 시점을 말한다.

17)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P4G)는 한국, 덴마크, 칠레, 에티오피아, 케냐, 멕시코, 베트남이 녹색성장과 2030년 지구적 목표(P4G)를 위한 파트너십을 맺어 상호협력과 교류를 위해 결성.

## 03 오바마와 이명박 정부 그린 뉴딜 비교<sup>18)</sup>

### 1) 오바마 정부의 그린 뉴딜 주요 내용과 성과

#### ■ 재임 기간(2009.1~2017.1) 동안 재정투입과 법 제정,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해 실행

-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 시 10년에 걸쳐 1,500억 달러를 들여 500만 개의 그린 칼라(green collar)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약속(Collina and Poff 2009). 2009년 2월 17일 서명한 「미국경기회복과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은 경기부양책으로 7,87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데 녹색산업 투자액은 941억 달러로 전체 자금의 12%(French, Renner and Gardner 2009)
- 200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한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법」(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이 의회(하원)에서 승인되었지만 2010년 상원 통과 실패.<sup>19)</sup> 2013년 기후 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 발표 등 대통령 권한으로 그린 뉴딜 정책 수행(박시원 2015). 2015년 8월 3일, 청정전력계획을 통해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안 발표. 2030년까지 발전부문 탄소 감축 목표(2005년 배출량 대비)를 32%로 높이고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8%로 상향
- 그린 뉴딜 정책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 향상을 목표로 에너지, 교통, 건물, 인력양성 네 가지 부문 중점 지원(〈표 2〉 참조)
- 에너지 효율 개선 분야(그린 빌딩, 전력망, 친환경 차, 철도 등)에 전체 투자의 51.1%에 해당하는 574억 달러 투자.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Carlock, Mangan and McElwee 2018, 7). 재생가능에너지는 393억 달러(35%), 수처리 및 쓰레기 처리 분야는 156억 달러(13.9%) 투자

18) 본 장은 이유진, 이후빈(2019)의 “미국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6호. 세종: 국토연구원”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19)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법」은 온실가스 감축 실행수단으로 청정에너지 활용,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2005년 기준 2020년 17%, 2050년 83%로 설정.

**표 2** 2009년 「미국 경기회복과 재투자법」 중 그린 뉴딜 관련 집행 예산

부문	내용	금액
에너지	전력망 현대화와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신설	110억 달러
	에너지효율과 절약 부문 정액 교부금(block grant)	63억 달러
	재생가능에너지 및 송전 사업 대출보증	60억 달러
수송	철도 투자	93억 달러
	대중교통 투자	84억 달러
	차세대 배터리 체계(advanced battery systems) 보조금	2억 달러
건물	저소득층 가구 내후화(weatherization) 보조	50억 달러
	연방정부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45억 달러
인력양성	에너지효율 및 재생가능에너지 연구	25억 달러
	에너지효율 및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직업훈련	5억 달러

자료: French, Renner and Gardner(2009, 9)에 기초해 저자가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함. 이유진, 이후빈(2019, 5)에서 재인용.

■ [에너지] 세금환급, 대출보증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지원, 재임 기간 풍력 및 태양광 전력 369% 증가, 석탄생산 38% 감소,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배출 1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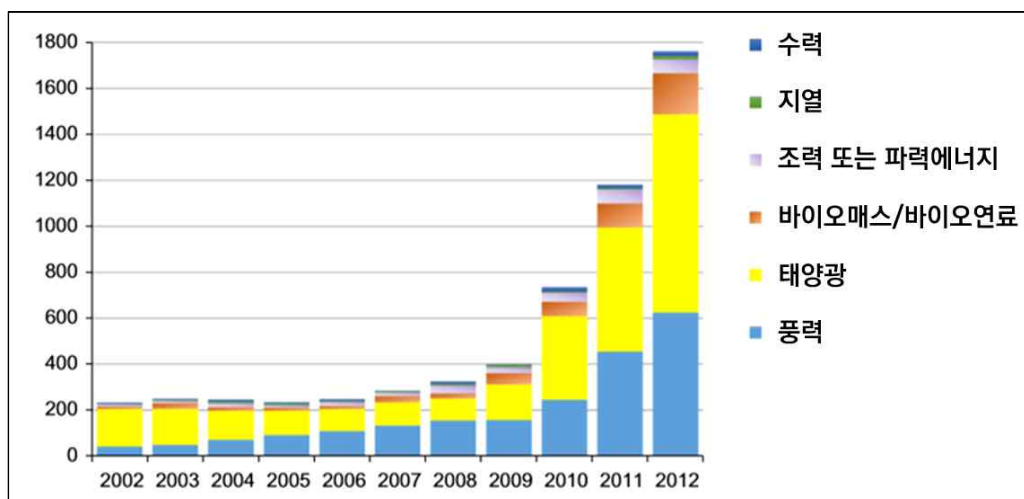
○ 주요정책

- 에너지투자 세액공제(Business Energy Investment Tax Credit, ITC)는 태양광과 연료전지, 소형풍력 발전시설 투자 시 투자세액의 30%를, 지열발전과 마이크로 터빈·열병합발전 투자 시에는 투자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정책.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생산 세액공제(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Tax Credit, PTC)는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발전 등을 이용해 150kW 이상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 추진 시, 운전 개시 후 10년간 단위전력 생산량 당 설비비 일정 금액을 환급(장현숙 2012)
- 에너지혁신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보증 프로그램(Department of Energy's Loan Guarantee Program)을 마련, 2500만 달러 이상 프로젝트 최대 80%까지 대출보증(유학식 2017)
-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수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시설 확충을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채권(Clean Renewable Energy Bonds, CREBs) 16억 달러 발행. 에너지 절약채권(Qualified Energy Conservation Bonds, QECSBs) 24억 달러 발행. 주 정부, 지역 정부 프로그램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 프로젝트 지원(장현숙 2012)

○ 주요성과

- 오바마 정부 때 재생가능에너지 설비 4배 이상 증가, 대규모 풍력 및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하는 전력 369% 증가, 전력 중 풍력과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4%에서 2016년 6.5%로 증가, 태양광은 2008년 대비 2016년에 43배 증가(Jackson 2018)
- 미국 에너지정보국에 따르면 2008년에 비해 2016년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 감소(EIA 2017). 2016년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1988년 이래 가장 낮음. 전력믹스에서 석탄발전은 48%에서 30%로 감소하였고, 천연가스는 21%에서 34%로 증가하였으며 원전 비중은 20% 미만 유지
- 2019년 12월 27일 기준 RE100<sup>20)</sup> 참여 기업은 221개, 애플, 구글, 페이스북, 월마트 등 미국기업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동맹(Renewable Energy Buyers Alliance, REBA)도 미국기업이 주도
-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말 풍력과 태양광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공화당이 요구한 셰일가스와 원유 수출 허용. 2015년 12월 미국 의회가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사업과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에 합의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호황 유지

**그림 2** 미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설비 증가 추이



출처: Mundaca and Richter 2014.

20) RE100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재생가능에너지 캠페인. 2014년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과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가 연합해 시작(<http://there100.org/companies>).

## ■ [수송] 연비규제 강화, 대체연료 설비와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전기차 산업 성장

### ○ 주요정책

- 2012년 기업평균연비규제(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 기준을 발표해 평균 1갤런당 36마일(약 15km/L) 수준인 연비 기준을 2025년 1갤런당 54.5마일(약 23km/L)로 강화. 자동차 가중평균연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벌금 형태 세금 부과, 기준에 들어맞지 않으면 0.1MPG(Miles Per Gallon)당 5.5달러 과태료 부과(전승표 2014)
- 전기, 수력, 천연가스 등 대체에너지를 활용한 연료 펌프를 설치하는 주유소 등 사업체에 세금 공제 혜택 제공. 2009년부터 미국 소비자들은 충전식 전기차를 구매하면 세금 2,500달러를 공제받고 배터리 용량에 따라 추가로 최대 7,500달러까지 세액 공제(최도영, 박찬국, 김수일 2012)
- 2009년 3월 19일, 24억 달러 규모 전기차 인센티브 제공 계획 발표. 2015년까지 하이브리드/전기 차량 100만 대 보급 및 배터리 개발부터 실증 사업에 이르기까지 전기차 동차 생산과 관련된 전 산업을 대상으로 총 48개의 프로젝트 진행(최도영, 박찬국, 김수일 2012)
- 2016년 7월 '전기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 발표. 충전시설 인프라 확장 사업에 최대 45억 달러(약 5조 원)까지 대출 보증, 대체연료 충전 인프라 지역 지정절차 제정 추진, 기술혁신을 위한 EV 해커톤<sup>21)</sup>, 가정과 직장 내 충전 인프라 확대 프로그램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권혁주 2016)

### ○ 주요성과

- 기업평균연비제도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기자동차 판매 유도(최도영, 박찬국, 김수일 2012), 전기차 관련 기술개발 지원과 인프라 구축으로 테슬라 모터스(Tesla Motors)가 급격히 성장함

## ■ [건물] 건물에너지 효율화, 연방정부 건물과 저소득층 주택의 에너지효율화 사업

### ○ 주요정책

- 에너지효율빌딩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2013년까지 냉난방에너지 대비 50% 이상을 절약하면 제곱피트(ft<sup>2</sup>)당 최대 1.80달러 세금 공제, 외장재, 조명, 냉난방 등 시설 교체로 에너지를 절감하면 제곱피트당 최대 60센트 추가로 면제(장현숙 2012). 2009년

21)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일정 시간 내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벤트를 말함.



「미국 경기회복과 재투자법」에 따라 내후화 사업(Wheatherization)<sup>22)</sup>에 50억 달러 (5조 6천억 원)를 투입해 3년 동안 약 100만 가구 주택에너지 효율화 진행(Coggin 2016a). 2015년 오크리지 국립연구소(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에 따르면 내후화 사업으로 절감한 주택에너지 비용은 평균 283달러이며, 내후화 보조사업에 투자된 1달러는 에너지편익으로 1.72달러, 비에너지 편익으로 2.78달러의 경제적 효과

- 내후화 사업은 사전검사(advanced audit)와 직접 자금지원 제도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음. 전문적인 감사관이 최신 장비와 건물에너지 진단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사전 검사함으로써 효율적인 개량방식 선택(Coggin 2016b)

○ 주요성과

- 일자리 창출, 에너지 소비 감소, 저소득층 가구소득 보전 효과가 발생하였으며(Coggin 2016a), 기후진보(Climate Progress) 분석결과 1,000개의 지원기관 형성, 4,000개 사기업 참여, 분기당 12,000개 일자리 창출

**그림 3** 내후화 사업(WAP)의 정책 성과



주: 가구당 4,695달러를 투입해 8,500개의 일자리 창출 및 가구당 에너지 비용 평균 283달러 감소 효과.  
출처: DOE(Department of Energy) 2018.

22)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내후화 사업(Wh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은 1973년 석유파동으로 저소득층의 난방요금을 줄이기 위해 1976년 「에너지 보존과 생산법」(Energy Conservation and Production Act)에 근거해 시작. 초기 플라스틱 시트로 창문을 덮고, 틈을 메우고, 문풍지를 붙이는 간단한 작업으로 진행하다가 1980년대부터 단열, 창호 등 영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 적용. 내후화 사업 신청 요건은 생활보조금지금 대상자이거나 부양아동가족부조 대상자, 60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아이가 있는 가정으로 가구당 지원액 감사 결과에 따라 최대 6500달러 직접 지원.

■ 오바마 대통령 재임 8년 동안 총 1,16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비농업 고용이 8.7% 증가<sup>23)</sup>했으며(Jackson 2018), 재생가능에너지 일자리 창출에 두드러진 성과

- 오바마 대통령은 2007~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취임. 2008년 경제위기로 타격을 입은 건설업과 제조업 실직 노동자들을 단기간에 경제에 복귀시켜야 했음. 건축장비 운전자, 지붕공, 토목기사, 용접공, 산업용 트럭운전자와 같이 기존 산업 분야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건물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 대거 일자리를 얻음(〈표 3〉 참고)
- 과학, 수학, 엔지니어 분야 학생들에게 매년 10만 달러의 ‘내일을 위한 청정에너지(Clean Energy Tomorrow)’ 장학금을 제공해 에너지전문가 양성(KOTRA 2009)
- 2017년 저탄소 배출 발전과 에너지효율 관련 산업에 고용된 미국인 수는 각각 80만 명과 225만 명이지만 석탄연소발전 산업에 고용된 미국인 수는 9만 명으로, 태양광과 풍력발전 분야의 고용효과가 두드러짐. 태양광 관련 일자리는 지난 7년간 168% 성장했고, 풍력발전의 터빈 기술자는 가장 빨리 늘어나는 일자리가 되었음(Carlock, Mangan and McElwee 2018)

**표 3** 그린 뉴딜 관련 일자리

녹색경제투자 전략	대표 일자리
건물 개조 (Building Retrofitting)	전기업자, 난방기/에어컨 설치업자, 목수, 건축장비 운전자, 지붕공, 절연업자, 목수 보조, 산업용 트럭운전자, 건설현장 관리자, 건물 검사관
대중교통/화물철도 (Mass Transit/Freight Rail)	토목기사, 철도 트랙 쌓는 사람, 전기업자, 용접공, 금속 조립공, 엔진 조립공, 버스 운전자, 배차원, 기관사, 철도 건축업자
지능형 전력망 (Smart Grid)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전기 엔지니어, 전기 장비 조립공, 전기 장비 기술자, 기계 운전자, 팀 에셈블리, 건축 현장 근로자, 운영 엔지니어, 전력선 설치자와 수리공
풍력 (Wind Power)	환경공학자, 철강업 종사자, 기계 수리 기술자, 금속기술자, 기계 운전자, 전기 장비 조립공, 건축 장비 운전자, 산업용 트럭 운전자, 산업 생산 관리자, 일선 생산 감독관
태양광 (Solar Power)	전기 엔지니어, 전기업자, 산업 기계공, 용접공, 금속 조립공, 전기 장비 조립공, 건축 장비 운전자, 설치 보조, 근로자, 건축 현장 관리자
차세대 바이오연료 (Advanced Biofuels)	화학 엔지니어, 화학자, 화학 장비 운전자, 화학 기술자, 혼합 기계 운전자, 농업 분야 근로자, 산업용 트럭 운전자, 농장 생산 구매자, 농림업 감독관, 농업 검사관

출처: Pollin, Garrett-Peltier, Heintz and Scharber 2008, 6; 이유진, 이후빈(2019, 7)에서 재인용.

23) 오바마 임기 내 실업률 중앙값은 7.7%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정부보다 높아,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이 필요하며, 그린 뉴딜 정책의 고용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역시 별도의 연구 필요(이유진, 이후빈 2019).

## 2)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주요 내용과 성과

■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건설, 토목, 제품 보급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

- 이명박 정부는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를 통해 국가발전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 정책 발표. 녹색성장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 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으로 정의<sup>24)</sup>
- 2009년 1월,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사업’ 추진방안 통과.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한 녹색 뉴딜사업은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구성. 소요예산은 50조 원 규모, 95만 6,420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뉴딜’ 예산 약 50조 원 중 ‘4대강 정비’를 포함한 토목사업에 32조 원 투입. 9개 핵심사업 중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확충, 우수유출시설, 중소댐, 친환경 생태하천(eco river) 조성 등이 국가재정 투입 토목사업이며, 27개 핵심사업도 주로 정비사업, 조성사업, 시설 구축 사업 중심으로 추진
- 토목사업은 단기간 건설 분야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으나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연결되기 어려움. 폐기물자원 재활용, 녹색 숲 가꾸기, 그린홈, 그린스쿨 사업은 각 부처에서 진행하던 환경 분야 사업이며 공공시설 LED 조명 교체나 그린카 역시 보급사업으로, 공적자금 투입이 관련 산업의 기술을 고도화하거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음.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성장 재정투입 방식과 효과에 대한 상세 분석 필요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국가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운영함으로써 2015년 1월부터 배출권 거래시장이 운영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증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에 에너지 수요관리 및 전기요금·세제 현실화 성과 미흡(관계부처합동 2019b)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목표는 ‘지속가능성’에 부합했으나 실행 내용과 결과가 목표와 어긋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형성하기보다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음.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신자유주의적 환경정책으로 생태계의 단순한 파괴를 초래하는 것이라기보다 창조적 파괴를 추구했다”는 비판(최병두 2010)

2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정의.

**표 4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사업’**

사업명		재정소요(억 원)	일자리수
핵심 사업	4대강 살리기 등	144,776	199,960
	녹색 교통망 확충	96,536	138,067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3,717	3,120
	우수유출시설, 중소댐	9,422	16,132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보급	20,527	14,348
	폐기물자원 재활용	9,300	16,196
	녹색 숲 가꾸기	24,174	170,702
	그린홈, 그린스쿨 사업	80,500	133,630
	eco river 조성 등	4,838	10,789
연계 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5,038	41,567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2,103	14,546
	수변지역 녹색화	8,000	19,900
	환승시설 구축	5,178	8,598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1,744	2,208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4,980	8,268
	(자전거 급행도로 시범사업)	3,000	4,980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340	760
	전자문서 활용 촉진	800	8,430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2,599	7,767
	해외 물산업 진출	1,989	1,452
	해수담수화 기술개발	1,124	7,400
	하수처리수 재이용	3,767	6,001
	그린카 독자기술력 확보	1,936	196
	바이오에탄올 차량보급 확산	30	60
	바이오에탄올(E5) 등 시범 보급	272	575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11,220	24,372
	바이오매스 생산기반 구축	2,808	4,924
	사용종료매립지 재개발	5,300	9,230
	재해예방, 훼손산림 복원	7,327	52,648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881	3,130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850	850
	공공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13,356	10,030
	그린IT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100	10,000
	그린홈 닥터 양성	160	1,332
	건물옥상, 벽면녹화사업	1,130	2,800
	에코로드 조성	310	920
	소규모 유희시설 문화공간화	360	532
<b>합계</b>		<b>500,492</b>	<b>956,420</b>

출처: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외 2009.

### 3) 오바마 정부의 그린 뉴딜과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비교

■ 오바마 정부의 그린 뉴딜은 재정투자를 바탕으로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을 활용함으로써 산업 생태계 구축,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토목 건설 사업 중심으로 진행

-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는 8년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국가 규모·정치법 체계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 오바마 정부는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2009년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법」입법은 실패했지만 「미국 경기회복과 재투자법」의 자금을 활용하고, 규제와 세액공제 제도 실행.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지원단을 구성해 강력한 추진 체계를 갖추었음
- 오바마 정부는 프리드먼 교수가 그린 뉴딜 성공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제시한 정부규제와 가격정책(Friedman 2007)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와 전기차 산업 육성.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 정책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등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정책 추진
- 오바마 정부 기간 전력믹스에서 석탄발전이 2008년 48%에서 2016년 30%로 감소하고,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11% 감소.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약속했으나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석탄발전을 대규모로 추가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에너지정책과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배출량 지속 증가

**표 5 오바마 정부의 그린 뉴딜과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비교**

부문	오바마 정부 그린 뉴딜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
재임기간	2009.1 ~ 2017.1(8년)	2008.2 ~ 2013.2(5년)
관련법	· 미국경기회복과 재투자법 ·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법 입법 실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 녹색성장지원단 구성
주요 내용	· 에너지 투자 및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생산 · 세액 공제 · 연비 규제, 내후화 사업	· 4대강 사업 · 그린카 청정에너지 보급
실행방식	· 예산 투입, 규제와 세액 공제 정책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와 전기차 산업 육성	· 예산 약 50조 원 중 4대강 정비에 32조 원 투입 · 정부 직접 예산 집행 또는 보조금 중심 사업
온실가스 배출량	·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11% 감소 · 전력 믹스에서 석탄발전 2008년 48%에서 2016년 30%로 감소.	·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약속했으나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발전 대거 추가 · 총 배출량 '05년 561.8, '10년 657.6, '13년 697.0 지속 증가(단위 : 백만 톤 CO2eq.)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9a.



## 04 한국사회 그린 뉴딜 적용 방안

### 1) 그린 뉴딜 담론과 지지세력 확보

#### ■ 한국 사회 그린 뉴딜 담론 형성

-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지속 증가. 환경부(폐기물), 산업통상자원부(발전·산업), 국토교통부(수송·건물), 기획재정부(재정) 등 모든 부처의 의지와 실행 없이는 목표달성 어려움
- 한국사회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피해비용, 탄소국경세와 RE100과 같은 간접 규제, 해외배출권 구입비용, 석탄발전 좌초자산화 등에 대한 대비 부족. 파리협정이 본격 이행되는 2020년부터 기후규제 강화가 예상되므로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함. 정부의 모든 정책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주류화하고 실행하는 경제·사회·환경 개혁 과제로 그린 뉴딜 필요
-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요 대안이 될 수 있음. 녹색성장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그린 뉴딜을 제안하고 토론. 국내외 그린 뉴딜 정책 성과분석을 토대로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그린 뉴딜 정책과 예산 투입 방안 마련
-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와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함. 지속가능발전(SDGs<sup>25</sup>), 기후위기, 녹색성장을 아우르는 국가 비전을 토대로 실행 정책으로서의 그린 뉴딜 추진
-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녹색성장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경제성장과 고용을 다루는 일자리위원회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등 정책목표와 수단이 유사한 사안에 각종 위원회가 중복되며, 운영은 분절되어 있음. 온실가스, 미세먼지, 에너지전환, 산업전환, 일자리 연계 차원에서 현존 위원회를 ‘그린 뉴딜’을 키워드로 통합적으로 논의 및 결정하는 구조 마련

25) SDGs는 인류의 보편 문제(빈곤, 질병, 난민 등), 지구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등), 경제사회문제(생산소비, 노사, 고용 등)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2015년 UN에 의해 수립된 17개 발전 목표.

■ 그린 뉴딜 - 다양한 논의 주체가 상향식 방식으로 논의해야

-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 정부 주도 하향식이었다면, 기후위기 시대에 등장한 그린 뉴딜은 시민사회, 노동계, 학계, 정당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상향식으로 논의해야 함. 그린 뉴딜 필요성에 동의하는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노동자, 농민, 청소년, 청년, 여성, 빈민, 소수자들을 위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경합과 토론 진행
- 기후위기 대안으로 정당에서 그린 뉴딜 정책 준비 중. 녹색당은 기본소득과 불평등 문제를 결합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 예정<sup>26)</sup>. 정의당은 진보의 경제 대안정책으로 그린 뉴딜경제위원회 구성.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형평성,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 일자리 해법을 담은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 추진 제안(배지영 2019).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탄소세 부과를 통한 대규모 재정투자로 발전·수송·건물 부문 산업전환을 담은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 제시(김성환 의원실 2019)
- 서울특별시는 도시 차원의 그린 뉴딜 정책 구상을 위한 기후행동포럼 구성·운영, “자치와 사람”을 뜻하는 서울지역 활동가 모임 <사람>은 그린 뉴딜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진행. 충청남도는 탈석탄에 따른 일자리 경제 대안으로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준비 중. 대전시 대덕구는 기초지자체 차원의 그린 뉴딜 정책 준비. 광주시에서는 시민들이 ‘그린 뉴딜 100인의 원탁’ 워크숍을 열고, 2020년 총선에서 그린 뉴딜 의제화 활동 진행
- 향후 경제사회인문연구회,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공동 논의하고 담론을 확장할 필요

**표 6** 국내 그린 뉴딜 정책 준비 동향

선언주체	내용	향후 계획
녹색당	2050 넷 제로 입법 제안	정책당대회에서 넷 제로 사회와 Real 그린 뉴딜 정책 마련
정의당	기후위기 대응·탄소 배출 제로 목표 설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제출	그린뉴딜경제위원회 구성 정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2050 탄소제로 위한 ‘한국형 그린뉴딜’ 도입 제안	2050 넷 제로 특별법안 준비 중
서울특별시	2050 넷 제로 선언과 1.5도 에너지 계획 수립	서울의 약속 2.0 계획 수립을 통해 2050 넷 제로 구체화
충청남도	충청남도 기후비상상황 선포, 2050년 탈석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정의로운 전환 연구 준비

26) 녹색당 정책대회 <기후위기 시대를 돌파하는 질문들> 발표(<http://www.kgreens.org/?p=23296>).



## 2) 그린 뉴딜 정책 적용 방안

■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정책으로 국정 운영에 탄소 예산제도 도입과 적용. 경제성장률(GDP)을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지표로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국가 지표 개발 필요

-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저지선 1.5도 목표와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감축목표량을 지키기 위해서는 탄소예산에 기반을 둔 온실가스 감축을 국정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함. 탄소예산은 경제전반에 대한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으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단계별로 설정하고 성과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부처별, 사업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설정하고, 예치(banking)와 차입(borrowing)을 가능하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으로 재정정책, 에너지정책, 교통정책, 주택정책, 일자리정책을 혁신적으로 재배치하고 예산 투자. 정부 재정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제도, 기술 개발, 사업 지원에 우선 투입. 정부와 민간이 전환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함
- 그린 뉴딜이 경제성장률(GDP, 국내총생산)<sup>27)</sup>을 중심으로 한 성장과 발전 패러다임에 갇히면 ‘케인스주의’적 경기부양책이나 토목사업으로 변질할 가능성 높음(이광석 2019). 그린 뉴딜이 녹색성장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지표를 재설정해야 함
- 국가 주요 지표로 경제성장률(GDP)을 사용해왔다면, 그린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저감 달성 여부와 불평등 해소, 시민 행복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해 적용. 새로운 지표에 대한 연구와 합의 필요
- 경제성장률(GDP)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지표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세계적으로도 시도되고 있음. 뉴질랜드는 국가 정책과 예산의 목표를 ‘부(GDP)의 성장’에서 ‘행복 증진’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음(김현대 2019).<sup>28)</sup> 아이슬란드는 총리실 직속 기구인 ‘웰빙지표위원회’가 국가 웰빙 측정을 위한 39가지 지표를 담은 권고안을 제시했는데, 주요 3대 항목으로 사회, 경제, 환경을 두고 세부항목에 기대수명, 건강, 평생 학습, 상호신뢰, 안전, 노동시간, 직업 만족도, 공기 질 등 일상에 미치는 변수 반영.<sup>29)</sup> GDP는 39가지 지표 중 하나가 됨

27) 실질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연간 증가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28) 뉴질랜드 2019년 행복예산안에는 정신건강 증진, 아동 빈곤개선, 마오리족과 남태평양 주민 보호, 국가 생산성 증진, 경제구조 전환 다섯 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 경제구조 전환에는 ① 농업과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감축(8천만 뉴질랜드 달러) ② 철도 투자 확대(4100만 뉴질랜드 달러) ③ 지속가능한 토양 관리 기관 설립(2.29억 뉴질랜드 달러).

29) 아이슬란드 총리는 약 700년의 역사를 지닌 ‘오크예퀴들’(Okjokull) 빙하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녹아 사라진 점을 언급하며, 이런 환경 재앙이 정부가 새로운 지표를 고민하게 된 계기라고 밝힘(연합뉴스 2019).

## ■ 기후위기와 재난에 회복력을 갖춘 인프라 재구축

-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 치러야 할 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기후위기, 지진, 홍수, 태풍과 같은 기상재해 대비 예산을 편성하고, 기후위기로부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로 재정비해야 함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하 상·하수관, 가스관과 송유관, 전력선, 통신선, 지하철/지상도로와 교량, 철도, 공항과 항만, 댐과 저수지, 발전소 등 2016년 기준 공공인프라 약 10.3%가 30년 이상 낡은 상황(경향신문 2019). 예산을 투입하고, 관련 운영 인력 고도화 대책 마련.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시 운영 에너지를 최소화하며, 장애인과 어린이, 노약자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적응과 안전 강화 대책도 필요
- 대기오염, 플라스틱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화학물질 유출 사고,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환경·안전·폐기물 인프라 예산과 인력 확대로 녹색산업 활성화

## ■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에서 수요 관리를 기반으로 한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

-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야 함. 그린 뉴딜을 통해 탈탄소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전 제시와 규제, 기술 개발과 지원, 사회적 약자 대책을 함께 수립해야 함
- 경로전환을 위한 전략적 투자는 재정투자가 시장 창출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산업 지원에서 사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투자, 시장과 수요를 창출해 스타트업과 인재가 육성되는 방식으로 추진(유종일 2019)
- 탈석탄 정책이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으로 연결되고, 내연기관 생산판매 금지 정책이 전기차, 수소차로의 전환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처럼, 탈탄소 산업 분야에서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규제정책의 역할이 필요함.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 교통, 건물 부문의 정책 비전 제시와 규제·지원정책이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함
  - **(에너지)** 수요 관리와 전환을 위한 에너지 가격·세제·시장 정책 재편, 전기요금 개편, 한국전력 개혁안 마련, 전력시장 제도 개편, 효율개선 사업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사업장 에너지효율 지원 또는 세금 환급제도 마련
  - **(교통)** 내연기관 퇴출 시점 설정, 수송에너지 가격 세제개편, 자동차 수요관리 정책, LNG 선박 지원, 전기·수소차 확대, 다양한 모빌리티 기반 서비스 확대
  - **(건물)**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에너지 등급의무화(진단→계획→모니터링→실행→인증서 발급)<sup>30)</sup> 제로 에너지건축과 대규모 그린 리모델링(공공건물, 어린이집, 임대주택, 노후주택, 생활SOC 등)으로 온실가스 저감

30) 건물 에너지등급화, 공공부문에 대한 대규모 그린 리모델링으로 기술과 인력 확보, 시장 창출 → 민간부문 확장전략 수립

- 온실가스 감축,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소통과 융합 강화, 정책조정을 통해 칸막이 현상을 극복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실행할 통합 추진체계 구축

**표 7** 탄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3대 전략

비전 제시와 규제	기술 개발과 지원	사회적 약자 대책
탈석탄·내연기관차량 생산판매 금지 에너지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전기요금 합리화, 수송에너지 분야 가격 세제 개편,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규제 등	전환기술과 산업에 대한 R&D 투자 와 검증적용,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설계, 시범사업 지원과 보조금	정의로운 전환 친환경화물차 구매지원 민감계층 사용 건물 그린 리모델링 영세사업장 ESCO 지원, 연료전환

■ 자치분권과 연계한 지역 에너지, 먹을거리, 경제체제로 전환

- 그린 뉴딜은 지방정부나 지역 공동체에서 기후비상사태 선포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다음 단계 전략. 지방정부는 지역 인프라, 공공 서비스의 개발 및 유지 관리를 감독하며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화석연료 인프라를 전환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음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규모에 맞는 그린 뉴딜 정책 수립해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확대. 생활 SOC,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지역에너지, 푸드 플랜, 사회주택, 공유경제, 행복경제 등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에서 시도해온 다양한 정책을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하는 그린 뉴딜로 재구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은 에너지, 교통, 건물뿐 아니라 폐기물 관리, 도시 인프라시설 관리, 도시공원과 숲 등 여러 다양한 영역을 포함
- 지방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고 인식해야 함. 그린 뉴딜 정책이 일자리와 지역산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민과 지역기업,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가 중요.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모델(도시전환모델, 농촌전환모델, 자립섬 모델, 산업단지 모델, RE100 모델 등) 구축과 지역전환센터 설립(온실가스, 에너지, 사회주택, 마을 만들기, 사회적경제 연계)
- 뉴욕시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와 같은 도시 지자체가 그린 뉴딜을 구축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1) 도시 방향 및 핵심가치 설정 2) 그린뉴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3) 공통 핵심가치에 기반을 둔 목표 및 장기계획 수립 4) 관련 조례나 법규 제정 5) 법적 근거를 갖는 녹색금융 기반 재원조달 전략 필요(이정찬 2019)

### 3) 그린 뉴딜 정책 추진전략

#### ■ 법과 행정조직, 위원회 재구축 - 재정조달 방안

- 파리협정에 따른 감축 목표, 나아가 2050년 넷 제로를 달성하는 그린 뉴딜은 정부 정책 추진과 운영 방식에서 기존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경제와 사회,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변화시켜야 함. 그린 뉴딜 추진을 위한 법, 행정체계, 정부위원회 재편, 국회 그린 뉴딜 특별위원회 구성 등
-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의 체계와 위원회 구조를 통합 조정해 넷 제로 입법과 기후변화법 검토. 이는 2022년 대선에서 법, 제도화,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서 구체화할 수 있음
- 그린 뉴딜 정책 수립과 예산 규모, 투입 방안 마련 필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예산 수립과 결정방식도 전환해야 함. 그린 뉴딜 정책계획 수립, 소요예산 측정, 인력양성 및 조달 계획 수립, 정책효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그린 뉴딜 재원 조달 방안 마련 필요. 미국에서는 현대통화이론부터 부유세 부과, 채권 발행까지 다양하게 논의. AOC는 그린 뉴딜에 필요한 재원을 최상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최고세율 70% 소득세를 부과해 조달하자고 주장(CNBC 2019)

#### ■ 단기 적용 가능한 그린 뉴딜 정책 실험

-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그린 뉴딜 방식으로 정책실험.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온실가스 감축,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융합. 예를 들면 1) 하수도 시설과 같은 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고도화(ICT 연계) 2) 도시재생 사업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접목해 기존 건축물과 주택을 ‘에너지 절약형’, ‘에너지 생산형’으로 전환 - 에너지효율 인력양성과 고용창출<sup>31)</sup> 3) 영세산업 현장 에너지효율 설비 보조금 또는 세금 환급제도 4) 공공기관, 어린이집, 임대주택, 노후주택 리모델링, 생활SOC 제로건축물 5) 폐기물 처리 인프라 구축 등
- 가격·세제·시장제도 개편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기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전면적인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실행. 건물과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에 정부가 보조금 지급. 노후주택의 냉난방에너지 비용을 줄여 간접적 소득지원 효과 발생, 온실가스 저감,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고용창출, 건축 분야 에너지효율 기술개발로 산업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31) 생활 SOC로 지역 체육관,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친환경 에너지건물을 지을 수 있음

## 05 결론

- 파리협정과 IPCC 1.5도 특별보고서로 인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인식 확산. '기후를 위한 청소년 파업'과 '멸종 저항',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동 확산
-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미국에서 결의안으로 제출된 그린 뉴딜 정책이 주목받고 있음. 미국사회에서 그린 뉴딜은 민주당 대선 정책으로 부상하면서 2020년에도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전망
-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며 일자리와 경기부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따라서 한국사회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그린 뉴딜 정책 준비 필요
-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4대강 사업과 석탄발전 확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단기 건설경기 부양 효과를 내는 데 그침. 2009년 오바마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은 「미국경기회복과 재투자법」에 따른 재정 투자,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면서 재생가능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 확대. 현재 미국에서 논의되는 그린 뉴딜 정책의 기초를 닦음
- 파리협정이 본격 이행되는 2020년부터 기후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탈탄소 경제로 전환을 서둘러야 함. 정부 정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주류화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경제, 사회, 환경 시스템 개혁과제로 그린 뉴딜 설정
- 한국사회 그린 뉴딜 적용 방안으로 1)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고 탄소예산제도 도입·운영 2) 기후위기와 재난에 회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프라 재구축 3) 에너지다소비 산업 구조에서 수요관리 기반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 4) 자치분권과 연계 지역 에너지, 먹물거리, 경제체제로 전환 5) 법과 행정조직, 재정조달 방안 마련 6)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그린 뉴딜 정책 실험 등이 있음

- 국내외 그린 뉴딜 정책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그린 뉴딜 정책 수립과 예산 투입 방안 마련. 규제, 요금, 세제, 시장제도 개편을 통해 녹색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비전 설정과 규제, 기술과 산업혁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을 통합 설계해 산업생태계 구축
-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재정정책, 에너지정책, 교통정책, 주택정책을 혁신적으로 재배치(온실가스 저감, 에너지효율향상,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정책, 가계 소득과 건강 증진 목적). 기후변화 대응 대안으로서의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전환과도 연결되어 있음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을 바꿔가면서, 그린 뉴딜을 지지하는 사회적 기반과 정치세력 형성. 그린 뉴딜에 대한 계획, 구현방식, 정책 의제화는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한국사회 주요 대안으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탄소예산에 기반을 둔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불평등을 없애는 일자리를 늘려,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함. 기후위기 시대,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담은 그린 뉴딜 준비 필요

## 참고문헌

- 강상원. 2019. 영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온실가스 규제. 규제동향지 여름호, 47-49.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강찬수. 2018. [강찬수의 에코사이언스] 온실가스 폭탄 돌리기. 중앙일보, 6월 19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전환적 뉴딜.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경향신문. 2019. 노후 인프라, 언제 터질지 몰라 무섭다, 9월 28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281049041#csidxaa18978a1d5964393d4e731fe8d96d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281049041#csidxaa18978a1d5964393d4e731fe8d96de) (2019년 12월 27일 검색)
- 관계부처 합동. 2019a.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https://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59&seq=7394](https://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59&seq=7394) (2019년 12월 27일 검색)
- 관계부처 합동. 2019b. 제3차 녹색성장 5개년(‘19~’23) 계획.
- 권혁주. 2016. 오바마 행정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지원 정책 발표.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ecoCartoon&nttId=191278> (2019년 12월 27일 검색).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외. 2009.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New Deal 사업’ 추진방안. 1월 6일, 국무회의 보고자료.
- 기획재정부. 2019. IMF,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양호평가...확장재정 권고. 정책브리핑, 9월 2일.  
<http://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64255>
- 김성환 의원실. 2019. [보도자료] 산업부, 2050 탄소제로 위한 대전환 준비해야, 10월 2일.  
<https://blog.naver.com/human-nowon/221673911862>(2019년 12월 27일 검색)
- 김정식. 2019. [김정식의 이코노믹스] 정부는 아니라지만 경제 위기 조짐 곳곳에서 보인다. 중앙일보, 11월 5일.  
<https://news.joins.com/article/23624350> (2019년 12월 27일 검색)
- 김현대. 2019. 뉴질랜드는 ‘행복’이 목표다 - 아던 정부 ‘가보지 않은 길’로 대전환. 한겨레21 1269호,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47273.html](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47273.html) (2019년 12월 23일 검색).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09. 선진국 녹색산업 육성 정책: 그린 뉴딜정책. *Green Report* 2호-141, 49-62. 서울: KOTRA.
- 매일경제. 2019a. EU, 기후 비상사태 선언...새 통상무기되나 - 유럽의회 결의안 채택  
<https://mk.co.kr/news/world/view/2019/11/1000032/>
- 매일경제. 2019b. 車·석유 산업 정점 찍고 내리막길...글로벌 대변혁 시작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2/1083203/>(2019년 12월 27일 검색)
- 박시원. 2015.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환경법연구 37권, 1호: 207-248.

배지영. 2019. 한국형 「그린 뉴딜」 제안: 기후위기, 일자리, 경제불평등 해법으로 부활한 미 그린 뉴딜의 시사점. 이슈브리핑 2019-10호. 서울: 민주연구원.

연합뉴스. 2019. 아이슬란드의 실험...GDP 아닌 '웰빙 목표' 세워 예산편성. 12월 4일.

이종일. 2019.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국정과제를 개편하라 - '전환적 뉴딜'을 위하여. 현안과 정책 278호.  
<https://www.good21.net/issuepaper/?q=YToy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l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2068669&t=board> (2019년 12월 27일 검색)

유학식. 2017.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정책과 시사점.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이광석. 2019. [이광석의 디지털 이후](12) 그린 뉴딜, 지구 구할 응급처방 될까...경기 부양용에 그칠까. 경향신문, 11월 28일.

이유진. 2019.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담은 그린 뉴딜이 필요한 때. 2020 한국의 논점, 289-297). 서울: 북바이북.

이유진, 이후빈. 2019. 미국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6호. 세종: 국토연구원. <http://krihs.re.kr/issue/issueReportView.do?&seq=120> (2019년 12월 27일 검색)

이정찬. 2019.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 - One NYC 2050 및 기후활성화법(Climature Mobilization Act)을 중심으로. 세종: 국토연구원. <http://www.krihs.re.kr/issue/issueWorkPaperView.do?&seq=21> (2019년 12월 27일 검색)

장현숙. 2012. 미국 신재생가능에너지 시장 진출전략. 에너지포커스 가을호, 101-116.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전승표. 2014. 전기 자동차(고연비 그린 자동차): 누가 연비 경쟁을 시키고 있을까? KISTI Market Report Vol.4, Issue.7.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조영철. 2019. 저축-투자 갭의 한국경제, 과감한 공공투자 확대로 나가야.  
[http://www.ecommons.or.kr/series/wikitopia/post/54?fbclid=IwAR0Vn5vFxlNHmPobqUgqd\\_s4Qkp-rgnHhwlUmLGFyJksiORKb9FSvTRZmSc](http://www.ecommons.or.kr/series/wikitopia/post/54?fbclid=IwAR0Vn5vFxlNHmPobqUgqd_s4Qkp-rgnHhwlUmLGFyJksiORKb9FSvTRZmSc) (2019년 12월 27일 검색)

최도영, 박찬국, 김수일. 2012. 전기자동차 보급의 에너지수급 영향 분석.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최병두. 2010. 신자유주의적 에너지정책과 '녹색성장'의 한계. 대한지리학회 45권, 1호: 26-48.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 2019. 저렴한 석탄, 위험한 착각: 한국 전력 시장의 재무적 위험 분석 보고서. 런던: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

통계청. 2019. 2019 '11월 고용동향'.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3/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9212&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3/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9212&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19년 12월 27일 검색)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제 도입방안 마련 연구 - 범정부 온실가스 감축 이행 관리제 추진방향. 서울: 녹색성장위원회.  
[https://policy.nl.go.kr/search/searchDetail.do?rec\\_key=UH1\\_00000114114787](https://policy.nl.go.kr/search/searchDetail.do?rec_key=UH1_00000114114787) (2019년 12월 27일 검색).

Aldy, Joseph. 2019. What Green New Deal Advocates Can Learn from the 2009 Economic Stimulus Act. The Conversation, February 15.  
<https://www.belfercenter.org/publication/what-green-new-deal-advocates-can-learn-2009-economic-stimulus-act> (2019년 12월 27일 검색)



Alexandria Ocasio-Cortez. 2019. FEBRUARY 8, 2019, Green New Deal: Fact Sheet ana FAQ From REP. Alexandria Ocasio-Cortez and Sen. Edward Markey, February 8, <https://www.heartland.org/publications-resources/publications/green-new-deal-fact-sheet-and-faq-from-rep-alexandria-ocasio-cortez-and-sen-edward-markey> (2019년 12월 27일 검색)

Carlock, G., Mangan, E. and McElwee, S. 2018. A Green New Deal: A Progressive vision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economic stability.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aa9be92f8370a24714de593/t/5ba14811032be48b8772d37e/1537296413290/GreenNewDeal\\_Final\\_v2\\_12MB.pdf](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aa9be92f8370a24714de593/t/5ba14811032be48b8772d37e/1537296413290/GreenNewDeal_Final_v2_12MB.pdf) (2019년 12월 27일 검색)

CNBC. 2019. Alexandria Ocasio-Cortez floats 70% tax on wealthy to pay for 'Green New Deal'. 1월 4일, <https://www.cnn.com/2019/01/04/alexandria-ocasio-cortez-floats-wealth-tax-to-pay-for-green-new-deal.html> (2019년 12월 27일 검색)

CNN. 2019. Trump rails against Green New Deal and 'socialism' in 2020 rally. February 12. <https://edition.cnn.com/2019/02/11/politics/donald-trump-el-paso-immigration-campaign-rally/index.html> (2019년 12월 27일 검색)

Coggin, J. 2016a. National Weatherization Network Celebrates 40 Years of Servic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 Renewable Energy <https://www.energy.gov/eere/articles/national-weatherization-network-celebrates-40-years-service> (2019년 12월 27일 검색)

Coggin, J. 2016b. The History and Evolution of America's Weatherization Network. Washington D.C.: Office of Energy Efficiency & Renewable Energy. <https://www.energy.gov/eere/articles/history-and-evolution-america-s-weatherization-network> (2019년 12월 27일 검색)

Collina, T. Z. and Poff, E. 2009. The Green New Deal: Energizing the U.S. economy, Friedrich Ebert Stiftung Washington office. <https://www.factcheck.org/2017/09/obamas-final-numbers/> (2019년 12월 27일 검색)

DOE(Department of Energy). 2018. Weatherization Works! [https://www.energy.gov/sites/prod/files/2018/06/f52/EERE\\_WAP\\_Fact%20Sheet-v2.pdf](https://www.energy.gov/sites/prod/files/2018/06/f52/EERE_WAP_Fact%20Sheet-v2.pdf) (2019년 12월 27일 검색)

eco America. 2018. American Climate Perspectives. <https://ecoamerica.org/wp-content/uploads/2018/09/american-climate-perspectives-survey-september-2018.pdf> (2019년 12월 27일 검색)

Encyclopaedia Britannica. New Deal. <https://www.britannica.com/event/New-Deal> (2019년 12월 27일 검색)

Friedman, T. 2007. A Warning from the garden. The New York Times, January 19, <https://www.nytimes.com/2007/01/19/opinion/19friedman.html> (2019년 12월 27일 검색)

French, H., Renner, M. and Gardner, G. 2009. Toward a Transatlantic Green New Deal: Tackling the Climate and Economic Crises. Heinrich Boll Stiftung Publication Series on Ecology Vol. 3. [https://us.boell.org/sites/default/files/toward\\_a\\_transatlantic\\_green\\_new\\_deal.pdf](https://us.boell.org/sites/default/files/toward_a_transatlantic_green_new_deal.pdf) (2019년 12월 27일 검색)

German Watch. 2019.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CCPI) 2020.

<https://www.climate-change-performance-index.org/country/korea> (2019년 12월 27일 검색)

Green New Deal Group. 2008. *A Green New Deal: Joined-up Policies to Solve the Triple Crunch of the Credit Crisis, Climate Change and High Oil Prices*. London: New Economics Foundation.

[https://neweconomics.org/uploads/files/8f737ea195fe56db2f\\_xbm6ihwb1.pdf](https://neweconomics.org/uploads/files/8f737ea195fe56db2f_xbm6ihwb1.pdf) (2019년 12월 27일 검색)

Harro van Asselt, Susanne Droge and Michael Mehling. 2019. How von der Leyen could make a carbon border tax work, July 22,

<https://www.climatechangenews.com/2019/07/22/von-der-leyen-make-carbon-border-tax-work/> (2019년 12월 27일 검색)

Hockett, R. C. and Gunn-Wright, R. 2019. The Green New Deal: Mobilizing for a Just, Prosperous, and Sustainable Economy. *Cornell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19-09. New York: Cornell Law School.

H.Res.109(하원 결의안 109). Recognizing the duty of the Federal Government to create a Green New Deal. <https://www.congress.gov/116/bills/hres/109/BILLS-116hres109ih.pdf> (2019년 12월 27일 검색)

IPCC. 2018, The 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 °C (SR15)

<https://www.ipcc.ch/sr15/download/> (2019년 12월 27일 검색).

Jackson, B. 2018. Obama's Final Numbers – Statistical Indicators of President Obama's eight years in office. <https://www.factcheck.org/2017/09/obamas-final-numbers/> (2019년 12월 27일 검색)

Labour Party Manifesto,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노동당 공약자료집 녹색산업혁명).

<https://labour.org.uk/manifesto/a-green-industrial-revolution/> (2019년 12월 27일 검색)

Mundaca, L. and Richter, J. 2015. Assessing 'Green Energy Economy' Stimulus Packages: Evidence from the U.S. Programs Targeting Renewable Energy.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42: 1174-1186.

Renewable 100. <http://there100.org/companies> (2019년 12월 27일 검색)

Sarlin, Benjy. 2019. What is the 'Green New Deal,' and how would it work? NBC, September 19.

<https://www.nbcnews.com/politics/2020-election/green-new-deal-how-it-works-presidential-candidate-positions-n1044811> (2019년 12월 27일 검색)

The Green Party of the United States. Green New Deal. [https://www.gp.org/green\\_new\\_deal](https://www.gp.org/green_new_deal) (2019년 12월 27일 검색)

UNEP. 2009. Global Green New Deal: Policy Brief, March.

[https://www.minambiente.it/sites/default/files/archivio/allegati/rio\\_20/unep\\_global\\_green\\_new\\_deal\\_eng.pdf](https://www.minambiente.it/sites/default/files/archivio/allegati/rio_20/unep_global_green_new_deal_eng.pdf) (2019년 12월 27일 검색)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EIA). 2017. Table 12.1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Energy Consumption by Source. *Monthly Energy Review* 28.

[https://www.eia.gov/totalenergy/data/monthly/pdf/sec12\\_3.pdf](https://www.eia.gov/totalenergy/data/monthly/pdf/sec12_3.pdf) (2018년 4월 20일 검색)

국토연구원 Working Paper는 다양한 국토 현안에 대하여 시의성 있고 활용도 높은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험정신을 가지고 작성한 짧은 연구물입니다. 투고된 원고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발간되며, 외부 연구자의 투고도 가능합니다. 공유하고 싶은 새로운 이론이나 연구방법론, 국토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 국내외 사례 연구나 비교연구, 창의적 제안 등 국토분야 이론과 정책에 도움이 될 어떠한 연구도 환영합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분은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044-960-0582, jhkim@krihs.re.kr)으로 연락주십시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WP 19-10

###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시사점과 한국사회 적용

기후위기와 불평등, 일자리 대안으로서 그린 뉴딜

**연구진** 이유진  
**발행일** 2019년 12월 30일  
**발행인** 강현수  
**발행처**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 2019, 국토연구원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협회에서 제공한 KoPub 서체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